“간병비 월 370만원… 외국인 노동자 늘려 비용 완화해야”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간병비 2016년 대비 50% 상승
육아 돌봄 서비스 월 264만원
고령화·인력난 심화에 비용↑

월 370만원. 어르신 한 명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이다. 아이를 한 명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50%를 웃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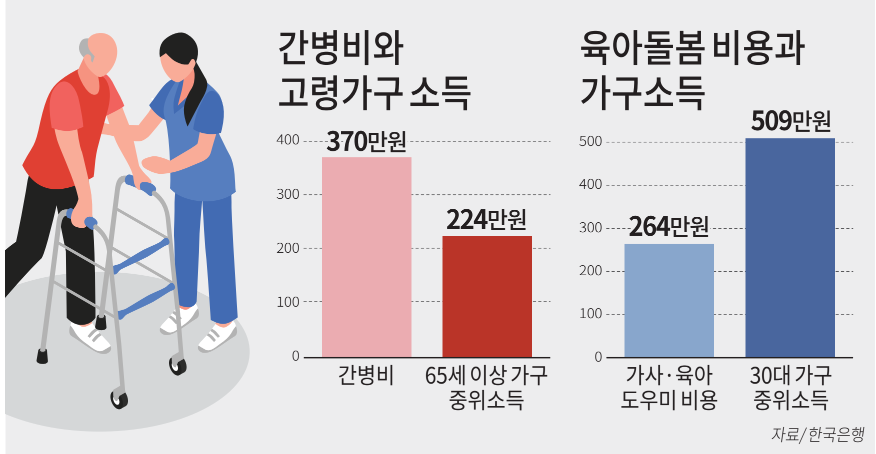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에 따르면 노인 돌봄을 위한 간병비는 2016년과 비교해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간병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육아 돌봄 서비스도 같은 기간 37%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육아 돌봄 비용은 10시간 기준 264만원으로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했다.

◆ 돌봄서비스 인력난에 비용 증가

돌봄서비스직 비용이 상승한 이유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돌봄서비스직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 수는 1.23개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설치·정비·생산지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민석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돌봄서비스직 일자리가 공석일 경우 한달 이내에 채워질 확률이 팬데믹 이전 80%이상에서 최근 50% 이하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문제는 인력난이 심화돼 비용이 치솟을 경우 피해는 취약계층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간병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소득 하위 10~40%인 노인의 경우 식사, 보행 등의 일상생활동작(ADL)과 대중교통 이용 등 자립적 생활(IADL)이 각각 15.4%, 13.4%로 고소득계층보다 높은 상황이다.

채 과장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0%에 달한다"며 "노인의 절반가량은 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빈곤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육아돌봄 서비스는 피해가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 및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육아 돌봄 서비스의 경우 20~30대 여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도우미 비용보다 낮아 퇴직을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외국인 노동자 도입 불가피

이날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채 과장은 "현재 돌봄서비스직의 경우 50대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다"며 "젊은층의 경우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선호가 낮아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돼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되더라도 대다수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취약계층의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7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은 1990년까지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해 그 수가 7만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상대임금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는 10년동안 3배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1990~2000년 중 0~5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별가구가 사적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별가구가 사적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ILO협약과 무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은 이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했다. 임금은 국내 가사도우미의 15~24% 수준이다.

채 과장은 "급여는 낮지만 고용주는 식사와 주거, 의료비, 항공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낮은 임금으로 인권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들의 업무만족도는 높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별도의 법 개정없이 현행제도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채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근무한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문제될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외국인 근로자와 차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농식품장관

"농촌 디지털 전환 등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 등 '3대 대전환'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농업인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K-무브스쿨 2418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상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연수생 모집에 나선다.

공단은 5일 2024년도 상반기 K-Move스쿨 운영기관 6곳(15개국, 129개 과정)을 선정, 운영기관에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연수생 241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2188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선정된 연수과정은 '미국(괌,사이판) 호텔리어 전문인력 양성과정(백석대)', '미국 셰프 전문가양성과정(대림대)', '싱가포르 호텔실무자 취업연수과정(한양여대)', '일본 공항서비스직 취업과정(더드림버스)' 등이다. 국가별로 △미국 45개 과정(824명, 25개 기관) △일본 44개 과정(888명, 16개 기관) △호주 10개 과정(130명, 5개 기관) 등이며,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과정의 약 절반 수준인 65개 과정(1160명, 27개 기관)을 지역에서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한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민 역량의 총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r

쇼핑몰·홈쇼핑 농식품 '원산지' 이달 집중단속

정부가 홈쇼핑 등 통신매체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일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며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이 지난 2019년 6.9%에서 2023년 기준 25.0%로 급증했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과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3715억 투입

보조사업 예산 전년比 42% 늘어나
올해 충전기 14만9000기 보급 방침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목표

정부가 올해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42% 늘어난 3715억 원으로 책정했다. 오는 6일 이 같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환경부는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 기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30만5309대가 설치됐고, 올해 추가로 14만9000기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 충전시설과 완속 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 충전기 11만 기와 100kW급 급속 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 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최대 500만 원 지원하며, 공용 급속 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 통신기술기준 등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 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 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 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4월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 시설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